

익산청 발주공사 ‘환경 오염·부실 시공’ 우려 ‘펄 흙·숯크리트’ 농지·도로 공사 혼합 매립

전남 목포시 달동(달리도)의 77호선(신안압해-해남화원) 국도 터널 공사장에서 토목공사 중 굴착된 ‘펄 흙’을 달리도 논과 밭 등에 농지 복토용으로 반출,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법 제41조의 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3호 등 2025. 1. 3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농지개량 제도 개선에 따른 농지개량 행위 신고 대상은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절토하려는 자로 총 필지면적 1천㎡ 및 높이·깊이 50cm 초과 (최근 1년 성토·절토 높이·깊이 합산 적용)이며, 성토 제는 자연상태 토양, 순환 토사(건설폐기물 법), 그 밖의 재활용 토사(폐기물 관리법)”이다.

그런데 이곳 달리도 공사업체인 서천건설(주)은 목포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마

치 농지 주와 건설사가 계약한 것을 명분 삼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펄 흙’·폐석이 섞인 건설폐기물을 농지 여러(10여 필지) 필지 수천 평방미터에 최고 높이 3미터까지 혼합 성토를 하고 있었다.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펄 흙’이 성토 재료 적합한가라는 질의에 ‘부적합’이란 답변과 함께 “단순히 오염물질이 없다고 하여 농지법상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펄 흙’은 농지 성토 재료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보자 A 씨는 농지에 성토되고 있는 흙은 “당시 달리도 방파제 공사 중 바다에서 굴착된 ‘펄 흙’을 매립한 흙이라며, 이를 농지에 매립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업자들의 편의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업자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곳 달리도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과 후 나온 자연 자원인 천연골재가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숯크리트 폐기물 잔해가 섞여 적재될 뿐 아니라, 1공구 도로 기반공사에 숯크리트 폐기물과 발파선들이 섞여 전체적으로 매립되어 방치되고 있고, 농지에 허가나 신고없이 ‘펄 흙’을 성토하는 불법성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전남도청과 사법기관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불법 행위와 도로 기반공사에 폐기물 혼합으로 인해, 부실 우려 공사 진행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위법한 행위를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성토제·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있다.

이에 익산지방국토청은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 오염 및 부실 시공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부



12일 오후 서울 중로구 경복궁 서삼각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의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스

세월호 참사 11년, 세월호 선체 보전·추모 사업 가시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선체를 영구 보전하고 추모·기억·안전 교육 등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전남 목포 고하도 신항만 배후부지에 짓는 가정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조성 사업은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세월호생명기억관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연대하고 안전 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해양 안전 복합 시설이다. 세월호 선체도 생명기억관 내에 영구 거치·보전되며 4·16기억관, 생명공원과 생명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사업 부지는 선체 임시 거치 장소인 목포신항만과 인접한 해상 매립 예정지 3만 4000㎡다.

최근에는 선체 처리 계획과 매립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도 열렸다.

부지 일대 대기·소음·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평가 결과·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중에는 갯벌 등 공유수면을 매우고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부지 기반 조성 공사부터 한다.

계획대로 라면 매립부터 기반도로 공사가 끝나는 2027년 하반기에 선체 이동 작업이 시작된다. 2017년 인양 이후 8년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조성

선체 1.7km 옮겨 영구보전, 추모·체험 복합시설 갖춰

내년 중 부지 매립공사부터…참사 15주기 완공 목표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안산 4·16생명공원 착공

목포신항만에 임시 거치된 세월호를 1.7km 옮기는 작업이다.

육중한 선체는 임시 거치 당시에도 쓰였던 특수운송장비 ‘모듈 트랜스포터’를 통해 옮겨진다.

선체 이동 이후에는 안정적 거치, 부식 방지 등 영구 보전 작업이 진행된다. 추모·기억·교육·체험 전시관 등 복합시설로 꾸러진 북측 건축물을 짓는 공사도 동시에 펼쳐진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참사 15주기를 맞는 오는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부지 조성 공사도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사업비 증액 등 향후 변수도 있어 정확한 준공 시점은 불확실하다.

유족들이 예타게 희생자 유해를 기다리던 진도 팽목항 인근에는 해양 사고 교육·체험 시설 ‘국민해양안전관’이 지난해 문을 열었다.

지하 1층·지상 2층, 4463㎡ 규모로 지어진 국민해양안전관에는 선박 탈출·선박 검사·이안류 등 특화 체험 프로그램 13종을 운용할 시설을 갖췄다. 다양한 해상 안

전 사고에 대비해 각종 구명 장비 활용·체험 교육이 가능하다.

아외에는 1947㎡ 규모의 해양 안전 정원과 함께 희생자 추념 조형물도 마련됐다.

사업 취지에 걸맞게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운영 활성화, 해상 안전 교육 콘텐츠 내실화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경기 안산 4·16생명안전공원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에 첫 삽을 떴다.

참사 희생자 대다수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 사회 건설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만든 세월호 유산 사업이다.

당초 참사 10주기인 지난해 준공이 목표였으나 사업 계획·예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빚다, 착공에 돌입했다.

안산 화랑유원지 내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봉안시설을 비롯한 추모 공간과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이듬해인 참사 13주기에 맞춰 문을 연다.

/이승원 기자

‘전파력 1000배’ 첫 돼지 구제역에 전남 비상

국내 7년 만, 전남 사상 첫 발생…바이러스 배출량 최소 1000배

무안, 사육두수 1위… 인근 4개 시·군도 양돈 밀집 “뿔리면 끝장”

항체율 98%, 해제검사서 무증상 감염… ‘돌파 감염’ 가능성도

10여 차례에 걸친 한우 구제역에 이어 이번엔 소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소 1000배에 이르는 돼지 구제역까지 터져 전남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7년 만, 전남에서는 사상 첫 돼지 구제역인 테다 도내 사육두수 1위 무

안에서 백신 접종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해 방역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무안 돼지 농장 2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농장은 지난달 15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한우농장과 각각 1.8km, 1.5km 떨어져 있다. 구제역 종식 선언을 앞두고 반경 10km 방역대 내 해제 검사 중 두 농장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정밀검사 결과 12마리가 구제역에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영암 한우농장에서 14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후 19일 만이다. 국내 돼지 구제역은 2018년 4월 이후 꼬박 7년 만이다. 구제역이 첫 발생했던 1934년 이후 91년 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위를 유지해온 전남에서는 사상 첫 돼지 구제역이다. (2면에 계속) /염선호 기자

